1 국민소득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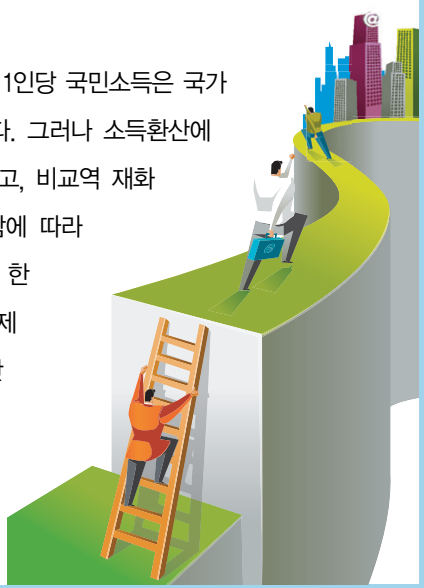
- 국민소득은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 국민소득은 생산, 분배, 지출 3면에서 포착 가능
- 국민소득은 포괄범위나 평가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
- 국민소득통계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경제분석지표를 작성
- 국민소득은 크기 못지 않게 개인간 분배상태도 중요
- 국민계정체계와 5대 국민경제통계

국민소득은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중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소득은 포괄범위나 평가방법 등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국민순소득(NNI), 국민처분가능소득(NDI), 국민소득(NI), 개인처분가능소득(PDI)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민소득지표로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그 국민의 생활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투자율, 저축률, 노동소득분배율 등 경제상황에 대한 각종 분석지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들 지표들은 경제정책을 수립, 평가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통계는 UN 등 국제기구가 마련한 '1993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를 기준으로 편제되고 있다. 이 국민계정체계에서는 밀수, 도박, 매춘 등과 같은 불법적인 경제활동이나 조세, 사회보장분담금 등의 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숨기는 생산활동의 결과도 국민소득통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가 자료부족 등으로 이를 대부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시장환율로 환산한 미달러 표시 1인당 국민소득은 국가간의 경제수준 비교를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환산에 이용된 시장환율이 자본거래의 영향을 많이 받고, 비교역 재화나 서비스의 상대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국가간 경제력이나 후생수준의 정확한 비교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UN이나 OECD같은 국제기구에서는 회원국 통화의 대외실질구매력을 반영한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 표시 1인당 국민소득을 산출하고 있다.



국민소득은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우리는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그 국민들의 생활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재정규모라든가 자동차 생산량, 인터넷 이용자 수 등을 통하여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이 과거에 비하여 얼마나 발전되어 왔는가 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국민경제의 한 단면만을 보여줄 뿐 종합적인 경제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적합하지가 않다. 즉 대만의 국제수지가 흑자라고 해서 국제수지 적자국인 미국보다 경제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이 많다고 해서 자동차 생산량이 적은 영국보다 경제수준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수준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데 이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국민소득통계이다. 이 통계는 경제현상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기준이 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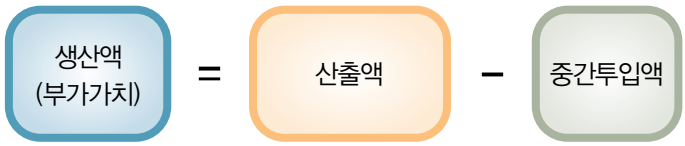
국민소득이란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흔히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라는 용어로 불린다.

먼저 「**재화와 서비스**」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 · 식 · 주 등의 생존적 욕망과 정신적 · 문화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되는 것으로 재화는 쌀, 의복, 자동차, 건물처럼 물질적 형태를 가진 것을 말하며 서비스는 통상 용역이라고도 하는데 운송, 숙박, 금융, 의료, 교육, 문화활동 등과 같이 형태가 없는 사람의 노력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일정기간**」이란 통상 1년 또는 1분기를 말하며 일정 시점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원인 한 근로자가 2005년 1년 동안에 2,000만원을 벌어 1,500만원을 소비하고 500만원을 저축하였다면 이 근로자의 2005년중(일정기간) 소득은 2,000만원이고 2005년말 현재(일정시점) 재산은 본래의 재산 1억원에 저축액 500만원을

더한 1억 500만원이 된다.

그리고 「**새로이 생산한 가치**」는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된 가치로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모두 판매하였을 때의 수입액과는 차이가 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재료는 이미 다른 데서 생산해 낸 것으로서 이 공장에서 만들어 낸 새로운 가치는 아니므로 물건의 값에서 이 원재료 투입비를 뺀 나머지만이 이 공장에서 새로이 생산한 가치라 볼 수 있다. 국민계정체계의 용어로 표시하면, 이 때 물건의 판매수입을 산출액(Output)이라 하고 원재료비를 중간투입액(Intermediate Input)이라 하며 새로이 생산한 가치를 부가가치(Value Added)라고 한다. 국민소득지표에서의 생산액은 이와 같이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공제한 부가가치를 뜻한다.



지금 자동차 공장에서 1,000만원짜리 승용차 1대를 만드는 데 원재료비가 500만원 들었다고 하면 이 공장의 대당 산출액은 1,000만원, 중간투입액은 500만원 그리고 부가가치는 산출액(1,000만원)에서 중간투입액(500만원)을 뺀 나머지 500만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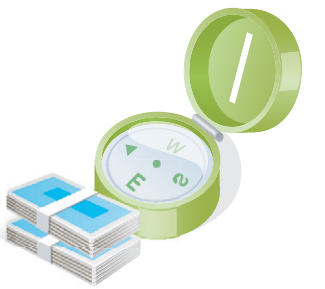
또한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이란 각 생산물에 해당 시장가격을 곱해서 화폐가치액으로 환산한 다음 이들 생산액을 합계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경제 내에서 산출되는 생산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각의 물리적 단위 또한 달라 단순 합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쌀 10가마와 옷 10벌을 단순히 합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쌀 1가마 값이 15만원이고 옷 1벌이 10만원이라 한다면 쌀 10가마와 옷 10벌의 가치합계는 150만원과 100만원을 더한 250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의 범위

국민소득은 국민경제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인데 이를 실제로 측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경제는 수많은 이질적 경제주체들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들 간에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잡한 거래관계에서 생산되고 처분된 각양각색의 재화와 서비스를 평가집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의 포괄범위에 관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다.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생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재화(goods)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모두 생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물론 생산자가 자신의 최종소비나 자본형성을 위해 생산한 재화도 생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서비스 가운데 가계의 가사 및 개인서비스 활동과 관련해서는 타인이 대신 수행할 수 없는 기본적인 활동(식사, 음주, 수면, 운동 등)은 생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타인에 의해 제공 가능한 활동(음식의 준비, 아이돌보기, 환자간호 등)은 타인에게 제공된 경우에 한하여 생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따라서 자가소비를 위한 전업주부의 음식준비, 아이돌보기 등은 생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등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가사서비스를 생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①가사서비스의 생산이 타 경제부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활동이며 ②시장판매를 위한 생산이 아니므로 가치를 평가하는데 적절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③또한 가사서비스는 보수를 받고 다른 가계를 위해 생산한 경우와는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지 않고, 생산에 포함할 경우 거의 모든 성인인구가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로 되어 고용통계에 왜곡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업주부 등이 생산한 가사서비스를 국민소득통계에 반영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전업주부 등이 생산한 가사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면 국민계정의 부속계정 등으로 편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국민소득통계 - 불법이거나 숨겨진 생산활동도 포함

밀수, 도박, 매춘 등과 같은 불법적인 경제활동이나 세금 탈루를 위해 축소 보고되는 개인서비스 판매, 사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행위, 뇌물수수 등은 국민소득통계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일까?

국민소득통계에서 생산활동이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특정의 재화 및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의 준수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활동은 모두 생산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소득통계 편제의 기준인 UN의 국민계정체계(1993 SNA)에서는 판매, 유통, 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된 재화 · 서비스의 생산에 대해 자료수집이 실무적으로 어렵지만 ①그 산출물에 대해 시장의 유효수요가 있고 ②불법생산에 의한 소득이 합법적으로 처분될 수 있고 또한 합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이라 하더라도 불법생산을 위해 지출될 수 있으며 ③불법생산의 누락은 전체 생산 및 소비의 종합적인 측정을 어렵게 하거나 추정오차를 크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생산활동으로 인식하여 통계에 포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생산활동이 일정한 기준 또는 규정을 충족하여 합법적이지만 조세나 사회보장분담금 등의 회피와 최저임금, 근로시간, 안전기준 등과 같은 법적 기준의 회피 또는 통계 및 행정 보고의무 등의 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숨기는 생산활동의 경우도 당연히 국민소득통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과 관련되지 않고 이미 발생한 소득이 이전되는 현상인 횡령, 절도, 뇌물수수 등은 생산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아 국민소득통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불법이거나 숨겨진 생산활동은 기초자료의 부족 등으로 실제 포착이 어려워 현행 국민소득통계에 대부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제행위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세금 탈루를 위해 숨겨진 생산활동도 많이 줄어들 것이므로 그만큼 국민소득통계의 현실 반영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소득은 생산, 분배, 지출 3면에서 포착 가능

국민소득은 세가지 측면에서 파악되는데 이를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이라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가지 국민소득은 그 크기가 똑같다. 그것은 국민소득이 생산→분배→지출과정을 통하여 순환하기 때문이다. 먼저 생산주체인 기업이나 정부가 노동, 자본, 토지 및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생산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부가가치 즉 생산국민소득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생산에 참여한 근로자는 급료와 임금,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 토지를 빌려준 사람은 임료를 받게 되고 정부는 다른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 즉 생산 및 수입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소득을 공제한 나머지가 이윤으로서 기업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소득을 모두 합하여 분배국민소득이라 한다. 따라서 생산국민소득과 분배국민소득은 같아진다.

또 분배된 소득은 개인이 물건을 구입하는 데 사용(소비)하거나 기업이 차기의 생산을 위하여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들이는 데 지출(투자)함으로써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며 이를 지출국민소득이라 한다.

이와 같이 **국민소득은 만들어서(생산) 나누어 갖고(분배) 쓰는(지출) 양이 모두 같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통계작성과 관련하여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편의상 국내총생산(=국내총소득)을 이용하여 3면 등가의 원칙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센서스 등 각종 기초통계가 지출활동이나 분배활동보다는 생산활동을 측정하기에 더 적합하도록 작성되어 있어 먼저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국내총생산을 작성하게 된다.

2005년중 생산측면에서 파악한 국내총생산액은 당해년가격으로 806조 6,220억원이며, 이를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이 204조 2,390억원, 서비스업이 404조 3,88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표1-1〉

표 1-1

우리나라의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 10억원)

	2001	2002	2003	2004	2005p
농업 임업 및 어업	24,806	24,655	24,166	26,246	24,036
광 공 업	153,787	164,003	171,208	200,831	206,688
(제 조 업)	151,766	161,952	169,145	198,554	204,239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4,649	15,929	17,011	16,733	16,889
건 설 업	47,182	51,542	61,330	64,773	66,031
서 비 스 업[1)]	309,585	345,963	366,047	385,735	404,388
총부가가치(기초가격)	550,008	602,092	639,762	694,318	718,032
순 생 산 물 세	72,115	82,172	84,913	85,063	88,590
국 내 총 생 산	622,123	684,264	724,675	779,381	806,622

주 : 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포함

2005년중 분배소득 측면에서 파악한 국내총생산을 보면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임금과 급료 등 피용자보수 361조 6,990억원,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인 영업잉여 238조 180억원,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고정자본(시설)의 감소분인 고정자본소모 110조 7,290억원, 정부가 다른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세금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제외한 순생산 및 수입세 96조 1,750억원으로 구

표 1-2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의 분배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 10억원)

	2001	2002	2003	2004	2005p
피 용 자 보 수	270,470	294,481	319,892	344,641	361,699
영 업 잉 여	185,662	210,636	214,763	236,769	238,018
고 정 자 본 소 모	88,113	91,113	98,851	105,618	110,729
생 산 및 수 입 세	79,352	89,959	93,617	95,561	99,719
(공 제) 보 조 금	1,474	1,926	2,447	3,209	3,544
국 내 총 생 산	622,123	684,263	724,675	779,381	806,622

성된다.〈표1-2〉

그러나 분배측면의 국내총생산은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추계과정에서 작성되는데, 제조업의 경우를 예로 들면 부가가치 204조 2,390억원이 분배활동 구성내역 즉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로 어떻게 배분되었는지의 비율을 파악하여 추계한다.

2005년중 지출 측면의 국내총생산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내역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민간최종소비지출 424조 6,300억원, 정부최종소비지출 113조 7,730억원, 총고정자본형성 236조 4,440억원, 재고증감 6조 2,110억원,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342조 8,000억원을 합한 금액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322조 5,670억원을 차감한 것과 같음을 알 수 있다.〈표1-3〉

표 1-3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 10억원)

	2001	2002	2003	2004	2005p
민간최종소비지출	343,417	381,063	389,177	401,469	424,630
정부최종소비지출	80,298	88,512	96,203	105,517	113,773
총고정자본형성	183,792	199,048	216,807	230,217	236,444
재고증감	-1,315	-42	292	6,430	6,211
재화와서비스의수출	235,187	241,209	274,995	342,865	342,800
(공제)재화와서비스의수입	220,914	231,765	257,728	309,647	322,567
통계상불일치	1,657	6,238	4,928	2,530	5,331
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	622,123	684,264	724,675	779,381	806,622

국민소득은 포괄범위나 평가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

국민소득은 생산의 포괄범위나 가격의 평가방법 등에 따라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 국민총소득(GNI)과 국민순소득(NNI), 시장가격 국민소득과 요소비용 국민소득, 실질국민소득과 명목국민소득** 등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으로 나누어진다.

현대 국가들은 국가 간에 자동차와 같은 상품을 팔고 사는 것은 물론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다. 즉, 자국의 생산자가 외국인을 고용하여 생산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자국인이 다른 나라에 나가 생산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렇듯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에 따라서 국민경제의 소득규모는 「영토」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 국내총생산과 「거주성」개념을 기준으로 측정한 국민총소득의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은 한나라의 영역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창출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서 합계한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생산자가 자국의 생산요소와 외국의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발생시킨 부가가치를 말한다.

앞서 설명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에 따라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측정한 국내총생산은 분배활동을 기준으로 측정한 국내총소득 및 지출활동을 기준으로 측정한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Expenditure on Gross Domestic Product)과 일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광공업센서스 산업생산지수 등 각종 기초통계가 지출활동이나 분배활동보다는 생산활동을 측정하기에 더 적합하도록 작성되어 있어 주로 생산활동 측면의 국내총생산을 중심으로 국민소득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GDP통계의 의의 및 평가

미국 상무부 장관인 William M. Daley는 1999.12.7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의 의장인 Alan Greenspan 및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인 Martin Baily와 함께 GDP 통계편제를 상무부의 20세기 최대의 업적으로 평가하였다.

GDP 통계는 1930년대초 Dr. Simon Kuznets(GDP 통계 개발에 대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에 의해 도입된 이래 정부와 기업들의 경제정책 수립의 기준이 되어 왔다. GDP 통계가 제공하는 경제상황에 대한 큰 그림이 없었다면 정책입안자들이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없었을 것이며 적절한 정책을 취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대공황(Great Depression)당시 Franklin Roosevelt와 그의 참모들은 철도 운송량이 줄어들고 철강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수백만의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경제상황에 대한 큰 그림(GDP 통계)이 없어 전체 경제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였다. 의사가 모든 진단결과를 분석한 후에 처방을 실시하는 것처럼 경제정책입안자들도 GDP 계정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위한 도구(tools)를 얻게 된다.

미국 경제의 흐름을 보면 GDP 통계가 완전하게 개발되어 널리 이용된 이후 경제의 호황과 불황의 폭이 훨씬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미국 GDP의 가장 큰 추락은 1932년의 13% 감소인데 지난 50년중 가장 큰 폭의 하락은 '81~82년의 1.9% 감소였다. 즉, GDP 통계가 개발되어 경제정책에 이용된 이래 과거와 같은 큰 폭의 경기순환(business cycle)은 사라졌으며 예금대량인출(bank run), 금융공황, 깊고 장기적인 경기침체, 장기실업 등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상무부는 GDP 통계라는 매우 유용한 경제지표를 장기간 제공함으로써 미국경제의 건실화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국민총소득(GNI)은 한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가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이 지표에는 자국민(거주자)이 국외로부터 받은 소득(국외수취요소소득)은 포함되는 반면에 국내총생산 중에서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요소소득)은 제외된다.

표 1-4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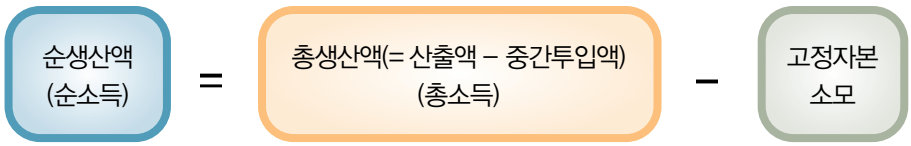
	2001	2002	2003	2004	2005p
국내총생산(GDP)	622,123	684,264	724,675	779,381	806,622
국외순수취요소소득	-1,095	806	745	1,794	-736
국외수취요소소득	9,218	9,201	9,117	11,479	11,220
(-)국외지급요소소득	10,313	8,396	8,371	9,685	11,956
국민총소득(GNI)	621,028	685,069	725,420	781,174	805,886

2005년중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806조 6,220억원에는 외국의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로 만들어진 부가가치 11조 9,56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표1-4〉 이 부가가치는 국외의 생산요소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요소소득(국외지급요소소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국민이 외국에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 즉 국외수취요소소득 11조 2,200억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2005년중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에 국외수취요소소득을 더하고 국외지급요소소득을 뺀 805조 8,860억원이 된다. 다시 말하면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에다가 국외수취요소소득에서 국외지급요소소득을 뺀 국외순수취요소소득(-7,360억원)을 더한 것이다.

둘째, 국민총소득(GNI)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하면 국민순소득(NNI)이 된다.

생산활동에는 공장 기계설비 등 고정자본(시설)이 필요한데 이들은 생산활동 과정에서 마손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생산에 이용된 기계 등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고정자본소모라고 한다. 따라서 일정기간중에 생산된 생산물의 순수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 생산능력이 저하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즉, 고정자본소모 만큼 조정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공장을 예로 들어보면 먼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체 등 각종 부품이 있어야 하며 또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기계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부품도 소비되지만 조립기계도 닳게 된다.

여기에서 총생산액은 산출액에서 부품구입액 등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총부가가치를 말하고 순생산액은 총부가가치에서 고정자본소모를 뺀 순부가가치이다. 그런데 고정자본소모는 현수준의 생산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언젠가는 지출될 부분이므로 이 공장의 입장에서 보면 총생산보다는 본래의 기계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이 생산해 낸 부가가치 즉 순생산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표 1-5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과 국민순소득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 10억원)

	2001	2002	2003	2004	2005p
국민총소득(GNI)	621,028	685,069	725,420	781,174	805,886
(–)고정자본소모	88,113	91,113	98,851	105,618	110,729
국민순소득(NNI)	532,915	593,956	626,570	675,556	695,156

2005년중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805조 8,860억원 중에는 생산과정에서 닳아 없어진 기계 등의 가치 즉 고정자본소모액 110조 7,29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표1-5〉 고정자본소모는 생산에 사용된 고정자산의 가액이 물리적인 마모 등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그 가치감소분의 화폐평가액을 말한다. 이는 고정자산 감모분을 새로운 고정자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부가가치의 일부를 비축해 두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새로이 생산해 낸 부가가치는 아니다. 따라서 새로이 생산해 낸 부가가치에서 고정자본의 가치를 원래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고정자본소모분을 차감한 국민순소득(Net National Income, NNI)은 695조 1,560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는 「순액」개념보다 「총액」개념의 국민소득지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고정자본소모의 정확한 추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총부가가치에서 고정자본소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안정적이어서 단기간의 시계열을 비교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 등으로 생산구조가 변하여 고정자본소모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간의 시계열분석에는 「순액」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셋째, 시장가격(market prices)으로 평가한 국민소득과 요소비용(factor cost)으로 평가한 국민소득이 있다.

국민소득을 평가하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시장가격에 의한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요소비용에 의한 평가이다. 시장가격이란 상품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순생산 및 수입세(생산 및 수입세－보조금)**가 포함되어 있다. 생산 및 수입세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과 같이 우리가 상품을 살 때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말하며 보조금이란 기업이 상품을 만들 때 정부가 그 상품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비용중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요소비용이란 시장가격에서 이와 같은 순생산 및 수입세를 공제한 것으로서 결국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와 같아지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우유 한병에 50원의 보조금을 주는 한편 우유에 70원의 생산세가 붙어 병당 300원에 거래된다고 하자. 이 때 우유의 병당 원재료비가 100원이 든다면 우유 한병의 시장가격에 의한 부가가치는 200원(300원－100원)이 되나 요소비용에 의한 부가가치는 시장가격에 의한 부가가치(200원)에 생산세(70원)를 빼고 보조금

표 1-6 우리나라의 시장가격 국민소득과 요소비용 국민소득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 10억원)

	2001	2002	2003	2004	2005p
시장가격 국민소득(NNI)	532,915	593,956	626,570	675,556	695,156
(-)순생산 및 수입세	77,878	88,033	91,170	92,352	96,175
생산 및 수입세	79,352	89,959	93,617	95,561	99,719
(-)보 조 금	1,474	1,926	2,447	3,209	3,544
요소비용 국민소득(NI)	455,037	505,922	535,400	583,204	598,981

(50원)을 더하여 180원이 된다. 즉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은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보다 순생산세(20원)만큼 적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국민소득지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시장가격이 각 생산물의 한계효용과 한계비용을 잘 반영하고 있어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복지수준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국민소득추계에 이용되는 기초자료도 대부분 생산관련 자료를 이용하는데 동 생산관련자료가 대부분 시장가격을 기초로 조사된 것이어서 생산관련 자료로부터 요소비용 국민소득을 직접 구해내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요소비용 국민소득은 주로 투입된 생산요소의 내역이나 각 산업의 생산성을 알아보는 데 이용하고 있다.

2005년중 우리나라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국민소득(National Income at market prices)은 695조 1,560억원으로 국민순소득(NNI)과 규모가 같다.

국민총소득이나 국민순소득은 모두 시장가격으로 평가되며 양자의 차이인 고정자본소모가 국민순소득에서는 생산비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요소비용으로 평가한 국민소득(National Income at factor cost)은 시장가격 국민소득에서 생산 및 수입세를 차감하고 보조금은 가산한 598조 9,810억원이다. 〈표 1-6〉

넷째, 명목 국민소득(당해년가격 국민소득)과 실질 국민소득(기준년가격 국민소득)이 있다.

명목 국민소득은 그 해의 생산물에 그 해의 가격(당해년가격)을 곱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명목 국민소득의 변동에는 생산물의 수량과 가격 변동이 혼합되어 나타나게 된다.

실질 국민소득은 생산수량으로 나타낸 소득을 말하는데 각 생산물마다 거래단위가 서로 달라 이를 합산하여 나타내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그 해의 생산물에 특정기준시점의 가격(기준년가격)을 매년 똑같이 곱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실질 국민소득의 변동액은 물가변동에 의한 증감액을 제거하여 생산물 수량의 변동만을 나타내 준다. 결국 수량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물가가 오르면 명목 국민소득은 그만큼 커지나 실질 국민소득은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커지지 않는다.

국민소득을 그때 그때의 가격 대신 특정년도의 가격(기준년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생산물의 가격이 변동하는 한 당해년의 가격으로 평가한 국민소득 계열만으로는 진정한 국민복지수준의 변동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4년에 생산된 재화의 수량과 같은 양의 재화가 2005년에도 산출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2005년의 물가가 25% 상승하였다고 한다면 당해년도의 가격으로 평가한 소득은 2005년에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25%의 국민소득 증가는 생산량이 25% 늘어나고 물가는 변동이 없는 경우와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생산량이 25% 증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로서 국민경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실질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국민복지수준이 그만큼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단순히 가격만 25% 증가한 경우에는 하등의 경제적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국민소득을 명목과 실질로 구분하여 추계하는 것은 두 가지의 국민소득이 각각 그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의 구조변동이나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중요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명목계열을 사용하게 되나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국민경제의 규모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질계열을 주로 이용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2005년도 국민소득규모를 보면 당해년도인 2005년 가격으로 평가한 명목 국내총생산(명목 GDP)은 전년보다 3.5% 증가한 806조 6,220억원이나 특정년도인 2000년 기준년도 가격으로 평가한 실질 국내총생산(실질 GDP)은 721조 4,910억원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하여 성장률이나 규모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7 우리나라의 명목GDP와 실질GDP

(단위 : 10억원)

	2001	2002	2003	2004	2005p
명 목 G D P (A)	622,123	684,263	724,675	779,381	806,622
실 질 G D P (B)	600,866	642,748	662,655	693,996	721,491
GDP 디 플 레 이 터 (A/B×100, 2000=100)	103.5	106.5	109.4	112.3	111.8

성장률면에서 보면 생산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실질 GDP가 4.0% 증가하였으나 명목 GDP는 3.5% 증가하였는데 이는 물가가 0.4% 하락한 데 기인하며 규모면에서 명목GDP가 실질 GDP보다 11.8% 큰 것은 기준년인 2000년에 비해 그동안 국민경제전체의 물가수준이 11.8%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차이는 국민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즉 GDP디플레이터로 설명이 된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기준년도인 2000년에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기 때문에 디플레이터지수는 100이 된다. 〈표1-7〉

끝으로 한 나라의 국민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민소득개념은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 즉 **본원소득(Primary Income)**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 국민이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본원소득 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가없이 수취하는 소득인 경상이전도 있다. 이러한 경상이전은 한 나라의 거주자간 뿐만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도 발생한다.

소득의 이전은 본원소득의 재분배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이를 나타내는 국민소득지표로는 한 나라 전체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발생하는 소득의 이전을 반영한 **국민처분가능소득(National Disposable Income, NDI)**과 개인과 정부 등 타 제도부문간의 소득이전을 반영한 **개인처분가능소득(Personal Disposable Income, PDI)** 등이 있다.

국민처분가능소득은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나타낸다. 국민처분가능소득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국민소득(NNI)에 교포송금 등과 같이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소득(국외수취경상이전)은 더하고

무상원조 등 외국에 지급한 소득(국외지급경상이전)은 뺀 것이다. 또한 국민처분가능소득에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개념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 GNDI)**이라고 하며, 저축률과 투자율을 작성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한편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순생산을 분배면에서 본 것이 앞에서 설명한 요소비용 국민소득, 즉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NI)이다. 이는 한 나라의 국민이 제공한 생산요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액으로서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 나라의 국민이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을 알아보는 데 사용된다. 아울러 **개인본원소득(Personal Primary Income, PPI)**은 위에서 설명한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NI)에서 법인소득과 정부가 받은 이자 임료 등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차감한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개인처분가능소득**은 개인본원소득에 개인이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정부나 기업, 국외로부터 수취한 이전소득은 더하고 정부, 기업 및 국외에 지급한 이전소득은 제외한 것으로 개인이 임의로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다. 또한 **개인조정처분가능소득**은 개인처분가능소득에 **사회적현물이전(social transfers in kind)**을 합한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현물이전이란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로서 예를 들면, 정부가 가계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육(초등학교 등)과 보건진료(보건소진료 등) 등이 있다. 이는 저소득층에의 생계비 지원 등과 같이 정부가 가계에 현금으로 지원하여 가계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경상이전지출과는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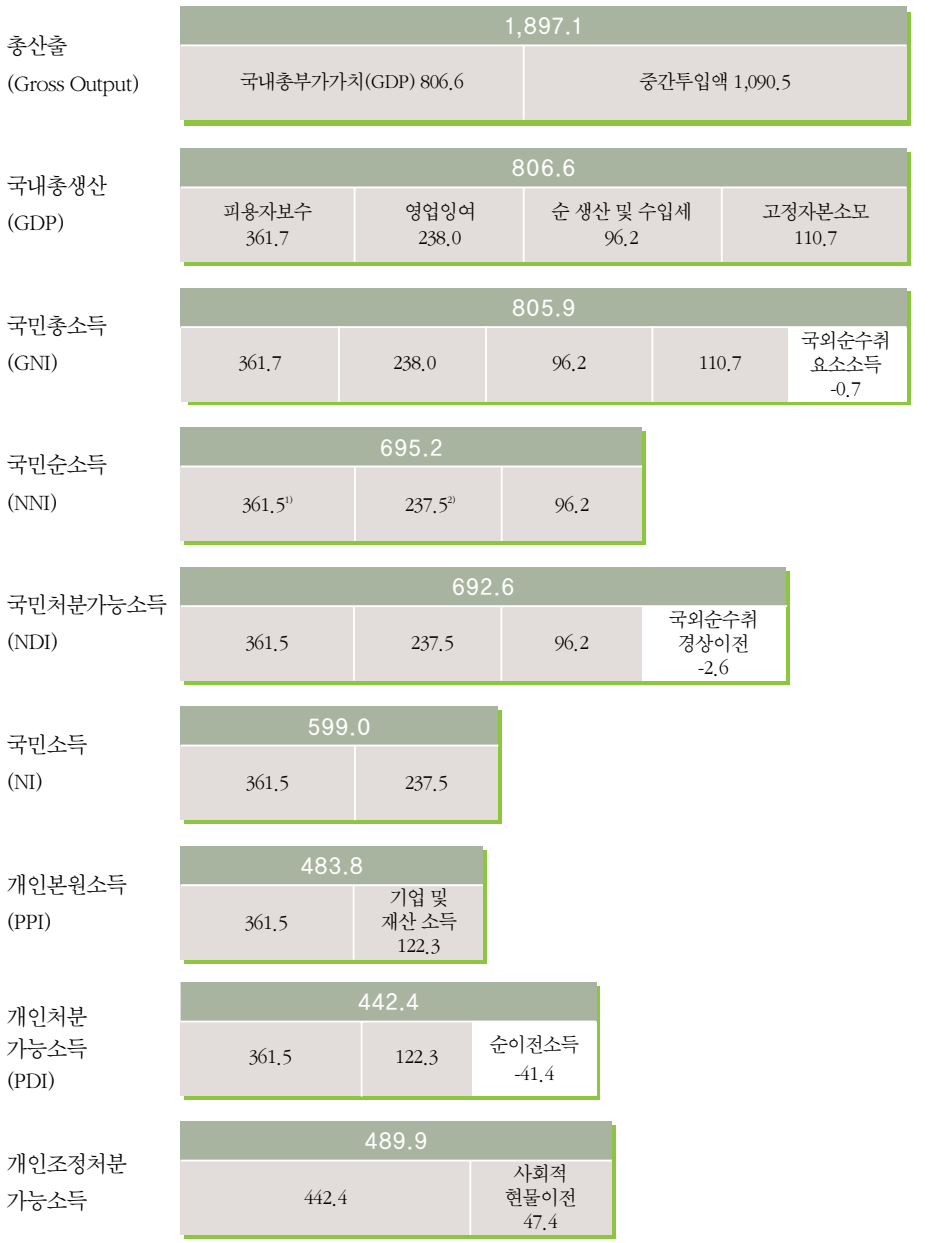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개념의 국민소득지표의 포괄범위를 나타낸 것이 〈그림 1-1〉이다.

그림 1-1

주요 국민소득지표의 포괄범위 비교

(2005년, 당해년가격 기준)

(단위 : 조원)



주 : 1)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포함 2)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포함

실질 국민총소득(GNI)의 개념

UN 등이 마련한 국민계정체계인 1993 SNA에서는 실질 총량지표를 생산지표인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소득지표인 실질 국내총소득(GDI), 실질 국민총소득(GNI)으로 구분한다.

실질 GDP는 생산활동의 수준을 측정하는 생산지표인 반면 실질 GDI 또는 실질 GNI는 생산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소득지표이다. 한 때 소득지표로 이용하였던 실질 GNP는 물량변화를 반영하는 생산지표(실질 GDP)와 소득지표(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가 혼합된 지표로써 성격이 불명확하여 '93 SNA에서는 이를 실질 GNI로 대체토록 하고 있다.

생산지표인 실질 GDP를 소득지표인 실질 GDI 또는 실질 GNI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출입가격(교역조건)의 변화에 따른 실질소득의 국외 유출 또는 국외로부터의 유입분을 나타내는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개념이 도입된다.

○ 실질 GDI = 실질 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 실질 GNI = 실질 GDI + 실질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또한 명목 GNP는 생산물량 변화 이외에 임금 및 기술수준, 기업 채산성,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무역손익 등이 포함되어 있는 소득지표이므로 현행대로 이용하되 명칭만 명목 GNI로 변경되었다.

'93 SNA의 총량지표 체계

〈 실 질 〉	〈 명 목 〉
실질 GDP	명목 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 실질 국내총소득(GDI)	
+ 실질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 명목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 실질 국민총소득(GNI ≠ GNP)	= 명목 국민총소득(GNI=GNP)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수출입상품간의 교환비율을 의미하는 교역조건(수출가격지수/수입가격지수)이 변화하면 생산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소득수준, 즉 후생수준의 변화를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기준년과 비교하여 교역조건이 불리해지면 일정량의 상품을 수출하여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감소하게 되므로 국민이 소비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어 경제적 후생, 즉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은 국가간의 거래에서 교역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소득의 국외유출 또는 국내유입을 의미하며 지표경기(실질 GDP성장률)와 체감경기(실질 GNI성장률)간의 주된 괴리요인으로 작용한다. 현행 실질 GDP는 교역조건이 변하지 않는 경우로서 교역조건이 바뀌면 실질 무역이익(교역조건 개선) 또는 무역손실(교역조건 악화)이 발생하여 실질 GDP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 소득수준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교역조건의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은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총 실질무역손익[(X−M)/P]에서 일정시점(기준년)으로부터 교역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의 실질 무역손익(x−m)을 차감하여 산출하게 된다.

$$T = \frac{X - M}{P} - (x - m)$$

- T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 X − M : 명목 무역수지 (당해년가격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차)
- P : 환가지수 〔수출입 가격지수의 평균 = (Px+Pm)/2〕
- x − m : 교역조건 불변 실질 무역손익 〔기준년가격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차 = (X/Px)−(M/Pm)〕

(예) 2000년(기준년)에는 자동차 10대(대당 1만달러)를 수출한 대금 10만달러로 공작기계 1대(대당 10만달러)를 수입할 수 있었으나 2005년(비교년) 들어 자동차 수출가격 하락(대당 1만달러→5천달러)으로 20대를 수출하여 공작기계 1대를 수입할 수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즉, 교역조건지수는 50으로 기준년에 비해 50% 악화) 2005년 실질 GDP는 20만달러(20대×1만달러)로 2000년(10만달러)에 비해 100% 증가하지만 2005년의 자동차 20대의 구매력은 공작기계 1대로 2000년과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2005년에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실(10만달러)이 발생하여 실질 GNI는 실질 GDP(20만달러)에서 교역조건 악화로 발생한 실질 무역손실을 차감한 10만달러로서 2000년과 동일하게 된다

국민소득통계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경제분석지표를 작성

우리는 신문, TV, 인터넷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률, 1인당 GNI, 저축률, 투자율, 노동소득분배율 등과 같은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지표들은 모두 우리 국민의 일정기간 동안의 경제활동 결과를 집약한 국민소득통계를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현실을 파악함은 물론 경제정책도 수립, 평가하게 되는데 그 중 이용도가 높은 주요 경제지표들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표 1-8 국민소득관련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10억원)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경제성장률	%	8.5	3.8	7.0	3.1	4.7	4.0
1인당 GNI	만원	1,226	1,311	1,439	1,516	1,625	1,669
	달러	10,841	10,160	11,499	12,720	14,193	16,291
〈경제구조〉							
농림어업	%	4.9	4.5	4.1	3.8	3.8	3.3
광공업	%	29.8	28.0	27.2	26.8	28.9	28.8
(제조업)	%	29.4	27.6	26.9	26.4	28.6	28.4
전기가스수도사업	%	2.6	2.7	2.6	2.7	2.4	2.4
건설업	%	8.4	8.6	8.6	9.6	9.3	9.2
서비스업	%	54.4	56.3	57.5	57.2	55.6	56.3
총저축률	%	33.7	31.7	31.3	32.8	34.9	33.0
국내총투자율	%	31.1	29.4	29.1	30.1	30.4	30.2
수출입의 대GNI비율	%	81.9	76.6	71.6	75.8	86.2	85.4
노동소득분배율	%	58.8	59.5	58.2	59.8	59.1	60.4
GDP 디플레이터	2000=100	100.0	103.5	106.5	109.4	112.3	111.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참조

경제성장률

각 경제활동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 즉 국민경제수준이 일정기간동안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이용하는데 일정기간 동안에 한 나라 경제가 이룩한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서 물가, 실업률, 국제수지 등과 함께 경제정책의 수립이나 평가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국민경제가 성장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증대되는 등 국민의 후생이 증진되어 개인과 국가의 복리와 안정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라 하면 물가요인을 제거한 실질 GDP성장률을 의미하며 1년 동안의 증가율을 측정하는 연간 GDP성장률과 1분기 동안의 증가율을 측정하는 분기 GDP성장률로 구분되며 연간 GDP성장률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text{GDP 성장률 (\%)} = \frac{\text{금년도 실질 GDP} - \text{전년도 실질 GDP}}{\text{전년도 실질 GDP}} \times 100$$

마찬가지로 특정 경제활동부문, 예컨대 농림어업부문의 성장률은 아래 산식으로 구할 수 있다.

$$\text{농림어업성장률(\%)} = \frac{\text{금년도 농림어업 실질 부가가치} - \text{전년도 농림어업 실질 부가가치}}{\text{전년도 농림어업 실질 부가가치}} \times 100$$

한편 분기성장률의 경우 계절변동조정 전기대비 분기성장률과 원통계의 전년동기대비 분기성장률 두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데 어느 지표를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중심이 되는 성장률을 주지표,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성장률을 보조지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4/4분기까지는 전년동기대비 분기성장률을 주지표로 사용하였으나 2006년 1/4분기부터는 계절변동조정 전기대비 분기성장률을 주지표로 사용하

고 있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1년간의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익숙한 지표이지만, 1년전의 시점과 비교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변동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반면 전기대비 성장률은 경기흐름을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전기대비 성장률을 주지표로 발표하고 있고 OECD도 경제지표 보도시 전기대비 성장률을 중심으로 발표토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특정 경제활동부문이 전체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성장기여도 또는 성장기여율인데, 어느 경제활동부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했는가를 보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면 농림어업부문의 경제성장기여율과 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text{농림어업의 경제성장 기여율 (\%)} = \frac{\text{금년도 농림어업 실질 부가가치} - \text{전년도 농림어업 실질 부가가치}}{\text{금년도 실질 GDP} - \text{전년도 실질 GDP}} \times 100$$

$$\text{농림어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포인트)} = \frac{\text{금년도 농림어업 실질 부가가치} - \text{전년도 농림어업 실질 부가가치}}{\text{전년도 실질 GDP}} \times 100$$

이렇게 구한 각 경제활동부문별 성장기여도를 합하면 전체 GDP성장률이 되며, 경제성장에 대한 각 부문의 비중을 나타내는 성장기여율을 합하면 100%가 된다.

이와 같은 기여도 및 기여율의 분석은 지출 항목별로도 가능한데 지출항목중 최종소비와 총자본형성을 합한 내수와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구해보면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2004년의 경우 내수와 수출이 모두 전년에 비해 호전되면서 성장률이 다소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출항목인 소비, 투자, 수출에는 국내 최종생산물 뿐만 아니라 수입원자재, 수입소비재 및 수입자본재 등 수입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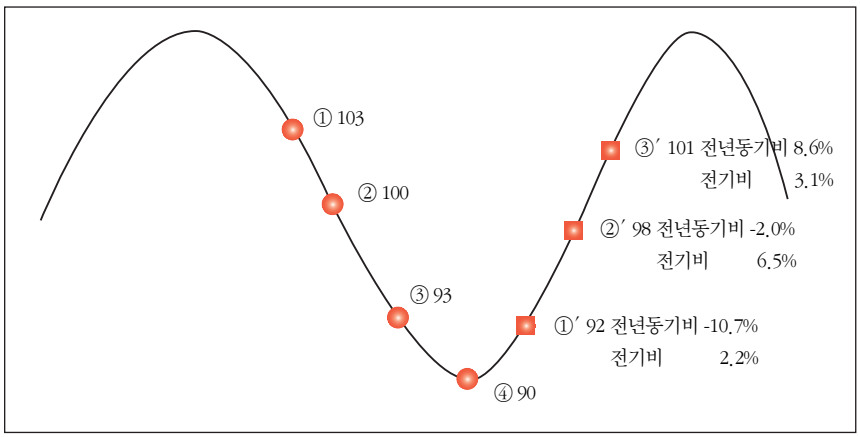
전년동기비 성장률과 전기대비 성장률의 비교

기존의 주지표인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전년의 같은 분기에 비해 당해분기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연간 성장률을 사전적으로 가늠하는데 적합하다. 또한 원계열통계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작성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변동성이 작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계절적 패턴이 4개 분기를 주기로 매년 일정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계절성분이 매년 바뀌게 되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며, 명절 · 공휴일 수 · 영업일수의 차이 등과 같은 달력효과를 제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이용하여 경제성장을 분석하는 경우 비교대상이 1년전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기전환점 포착시기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전기대비 성장률은 현재 분기가 전분기보다 나아지고 있는지 또는 나빠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통계적 기법에 의해 계절조정된 계열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예를 들어 〈그림〉을 살펴보면 전기비는 ①′ 시점에서 성장률이 양(+)의 부호로 전환되는 반면, 전년동기비는 이 보다 2분기 늦은 ③′ 시점이 되어서야 양(+)의 부호로 전환되어 경기에 대한 지연된 정보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기 흐름을 보다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서는 원통계에서 계절성분이 제거된 계절변동조정통계의 전기대비 성장률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경기국면 전환시 전년동기비와 전기비의 비교



경제성장률 중심지표의 변경(GNP→GDP)

경제성장률은 일정기간에 한 나라 경제가 이룩한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서 경기 및 생산활동 동향을 나타내는 경제지표이다.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중심지표는 경제환경이나 경제구조 등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성장의 정도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GDP(국내총생산)는 소유에 관계없이 국내에 있는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최종생산물의 합인 생산활동지표이며 GNP(국민총생산)는 한 나라가 소유한 생산요소를 국내외의 생산활동에 참여시킨 대가로 받은 소득을 합계하여 산출하는 소득지표로 GDP와 GNP는 각각 다른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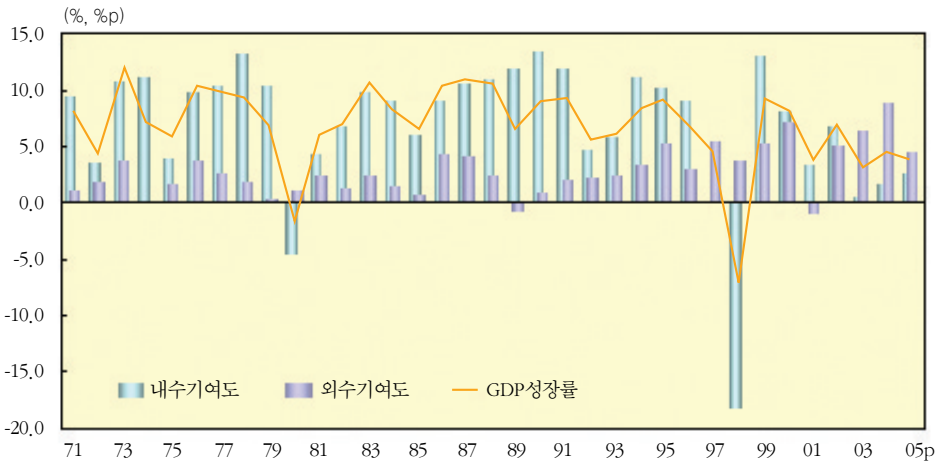
당초에는 거시경제분석의 초점이 소득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GNP를 경제성장의 중심지표로 삼았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노동이나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지표에 가까운 GNP기준 성장률이 국내경기 및 고용사정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각국은 경제성장의 중심지표를 GDP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다.

유럽의 OECD국가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91. 3/4), 독일('92. 3/4), 일본('93. 3/4) 등은 이미 '90년대 초반에 GDP를 경제성장의 중심지표로 삼았으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추세에 맞추어 '95년부터 경제성장의 중심지표를 GNP에서 GDP로 변경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한편, UN, IMF 등 국제기구가 제정하여 각국이 따르도록 한 국민소득통계의 국제적 편제기준인 국민계정체계(1993 SNA)에서는 물론 국내의 생산활동지표로 실질 GDP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소득지표로도 실질 GNP대신에 앞에서 소개한 실질 GNI(Real Gross National Income)를 편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지난 1999년부터 소득지표로 GNP대신에 GNI를 편제 · 발표하고 있다.

그림 1-2

내수 및 수출의 성장기여도



에는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에 대한 성장기여도 또는 성장기여율이 과장되므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및 기여율의 정확한 분석은 국내총생산보다는 최종수요(소비+투자+수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수출의 최종수요에 대한 기여율과 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text{수출의 최종수요에 대한 기여율 (\%)} = \frac{\text{금년도 수출} - \text{전년도 수출}}{\text{금년도 최종수요} - \text{전년도 최종수요}} \times 100$$

$$\text{수출의 최종수요에 대한 기여도 (\%포인트)} = \frac{\text{금년도 수출} - \text{전년도 수출}}{\text{전년도 최종수요}} \times 100$$

1인당 GNI

〔시장환율 환산 1인당 GNI〕

국민총소득(GNI)은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나,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알아보는 데는 적합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전체 국민소득의 크기보다는 1인당 국민소득의 크기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1인당 GNI**이다. 1인당 GNI는 명목 GNI를 한 나라의 인구 수로 나누어 구하며 국제비교를 위하여 보통 시장환율로 환산하여 미달러($)화로 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4년의 경우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GNI는 싱가포르의 6배 가량이 되지만 인구가 12배나 되기 때문에 1인당 GNI는 싱가포르의 1/2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경제력에 있어서는 싱가포르보다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국민들의 생활수준면에서는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매력평가(PPP) 환율 환산 1인당 GNI〕

한 나라의 경제력, 국민의 생활수준 및 후생수준을 다른 나라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국민소득통계를 이용하면 국가간 경제력이나 후생수준의 비교도 가능해진다.

현재 국가간의 경제수준의 비교를 위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통계가 시장환율로 환산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다.

그런데 시장환율은 한 나라 통화의 대외실질구매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즉, 시장환율은 통화의 구매력과 관계가 없는 자본거래에 크게 영향을 받는 반면 국가간에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교역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환율로 환산한 1인당 GNI는 실질구매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의한 국민소득통계의 국제비교 결과도 실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시장환율로 환산함에 따라 원화표시 국민소득에 아무런 변동이 없더라도 환율이 오르면(원화가치 절하) 달러화표시 국민소득은 원화가치 절하폭 만큼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2년 연속 1인당 1천5백만원을 벌었는데 시장환율이 1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 올랐다면 달

러화표시 1인당 GNI는 1만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UN 통계위원회는 이와 같은 시장환율의 적용에 따른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각국의 경제력과 국민의 생활수준을 실질구매력에 의해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각국의 상대물가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환율**이라는 새로운 환가수단을 개발하는 작업(국민소득 국제비교작업 :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을 하게 되었다.

PPP 환율에 의한 국민소득의 국제비교에는 각국의 상세한 지출국민소득 자료와 상품의 가격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국가의 단독작업은 거의 불가능하여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실시할 수밖에 없다. UN 통계위원회는 지난 1968년 처음으로 국민소득의 국제비교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매5년마다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1973년 제2차 편제작업부터 참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회원국과 일부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간 구매력 비교를 위해 1980년에 「OECD PPP(pruchasing power parity)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금까지 7회에 걸쳐 PPP환율에 의한 국민소득 국제비교작업을 실시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1999년 작업부터 참가하고 있다.

동 작업 결과 2004년의 경우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PPP 환율에 의한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20,530달러로 시장환율에 의한 1인당GNI(14,000달러)보다 1.5배 큰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실질구매력이 시장환율의 적용시보다 각 국의 상대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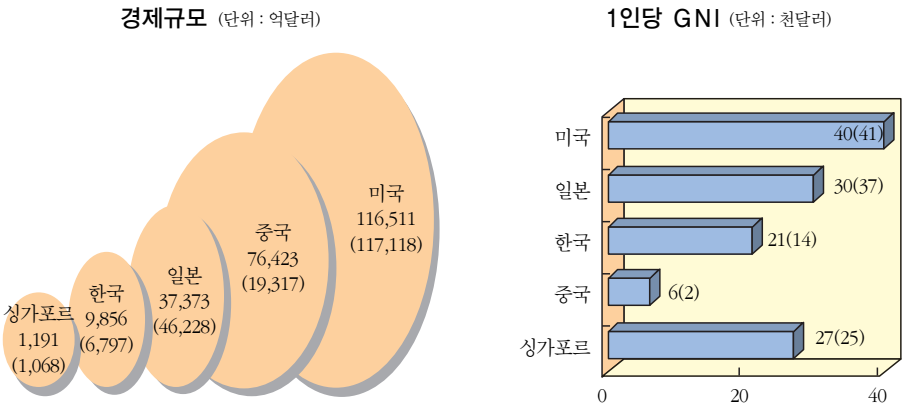
구매력평가 (PPP : Purchasing Power Parities) 환율

PPP환율은 장기적으로 각국의 물가수준 차이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통상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각국의 화폐가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PPP환율은 국가간 화폐의 교환비율이라기 보다는 자국화폐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데, 국가간 물가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GDP 등의 통계를 국가간 비교하는 데 사용된다.

(예) 미국에서 10달러를 주고 살 수 있는 상품(서비스 포함)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10,000원을 주어야 살 수 있다면 이 경우 명목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 된다.

그림 1-3 PPP환율기준 경제규모 및 1인당 GNI의 국제비교(2004)



주 : ( )안은 시장환율에 의한 경제규모 및 1인당GNI

경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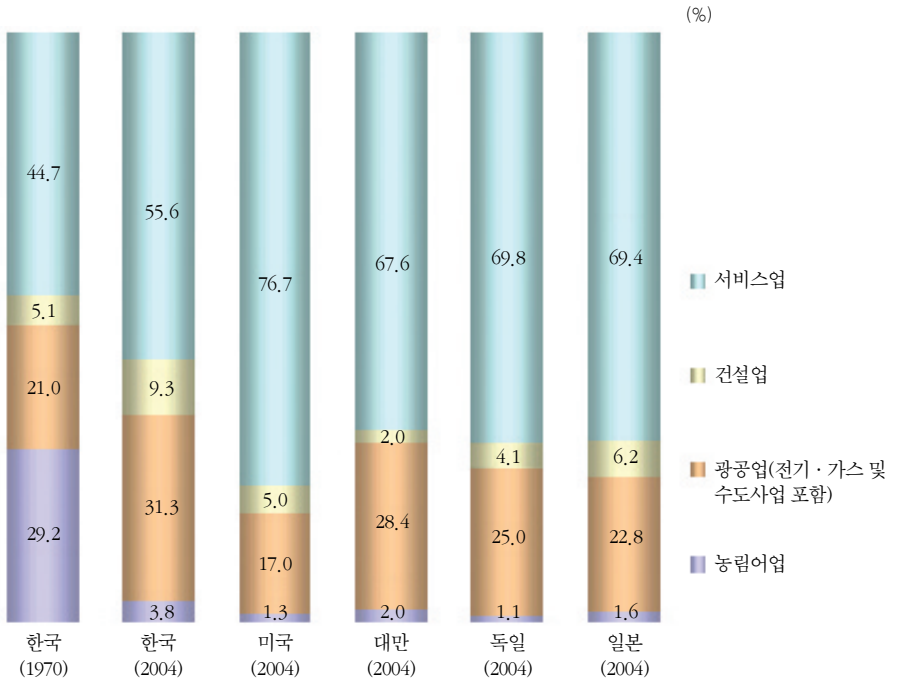
국민소득은 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것인데 국민소득이 경제의 어느 부문에서 얼마씩 생기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생산활동유형이 비슷한 것을 묶어 몇 개의 경제부문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한 나라의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경제부문을 보통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금융 ·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데 이용편의상 이들을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서비스업의 5개 부문으로 통합하기도 한다. 이러한 **각 경제부문이 만들어 낸 부가가치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구성비를 경제구조**라 한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변화를 보면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이 1970년의 29.2%에서 2004년에는 3.8%로 낮아지고 광공업과 서비스업부문의 비중이 각각 1970년의 21.0%, 44.7%에서 31.3%, 55.6%로 높아짐으로써 그 동안 우리 경제의 공업화 및 서비스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4

경제구조의 변화와 국제비교



저축률과 투자율

국민총소득(GNI)에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 더하여 국민총처분가능소득(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을 산출하며 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소비하거나 저축**을 하게 된다. 소비와 저축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을 각각 평균소비성향과 평균저축성향이라 하며 이들을 합하면 1이 되고 각각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소비율**과 **저축률**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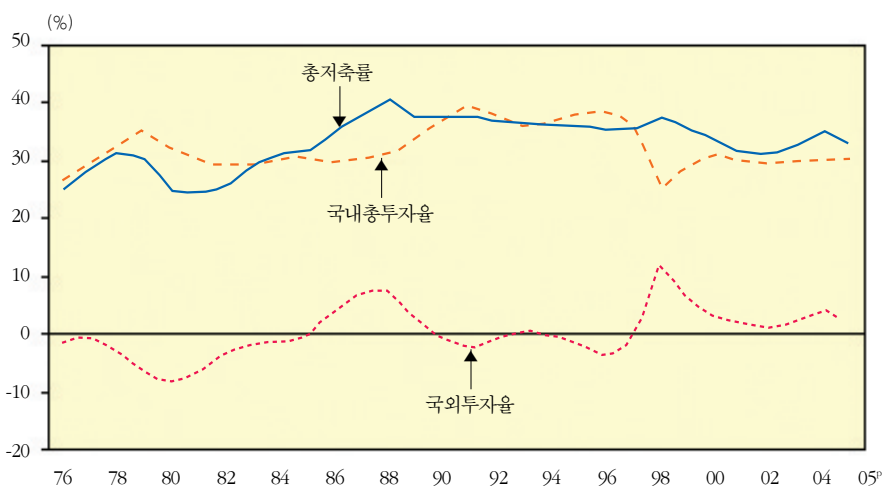
한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투자(총자본형성)는 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와 재고투자(재고증감)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기업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새로이 기계, 공장 등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의미하며 순고정투자는 고정투자에서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닳아 없어진 기계 등의 자본시설을 보충하는 대체투자(replacement investment)를 조정한 것을 말한다. 기업이 대체투자만 하는 경우에는 생산시설의 규모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확대 재생산을 통한 경제성장이 어려워지게 된다.

재고투자(재고증감)란 한 해 동안에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이 소비나 총고정자본형성 또는 수출로 처분되지 않고 창고에 쌓이는 부분을 말한다. 따라서 국민소득지표에서 말하는 재고투자는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상품의 총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해 동안에 증가되거나 감소된 재고증감액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2004년말 현재 재고총액이 2조원이었는데 2005년말에는 1조5천억원이 되었다면 2005년중 재고가 5천억원 감소되었으므로 재고투자는 마이너스 5천억원이 된다.

한편 투자를 위한 자금은 대부분 저축에 의하여 조달된다. 그러나 저축은 국내총투자보다 큰 경우도 있으며 작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저축으로 국내총투자를 충당하고도 남는 부분은 외국에 빌려 주게 되며, 반대로 모자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빌려와야 한다. 전자의 경우 **외국에 빌려준 자금은 자기나라 저축이 외국에 투자된 부분으로서 국외투자**라고 부른다.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공업국은 저축이 국내투자보다 크기 때문에 국외투자는 플러스(+)의 값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저축할 힘이 모자라면서도 경제개발 등에 많은 투자액이 소요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투자 부족분을 국외로부터 빌려오기 때문에 국외투자는 마이너스(–)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림 1-5

저축률과 투자율 추이



결국 국내총투자와 국외투자를 합한 총투자는 저축과 일치하게 되며, 이를 각각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구한 값을 국내총투자율, 국외투자율, 총투자율, 총저축률이라고 하는데, 이들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총저축률 = 총투자율

총투자율 = 국내총투자율 + 국외투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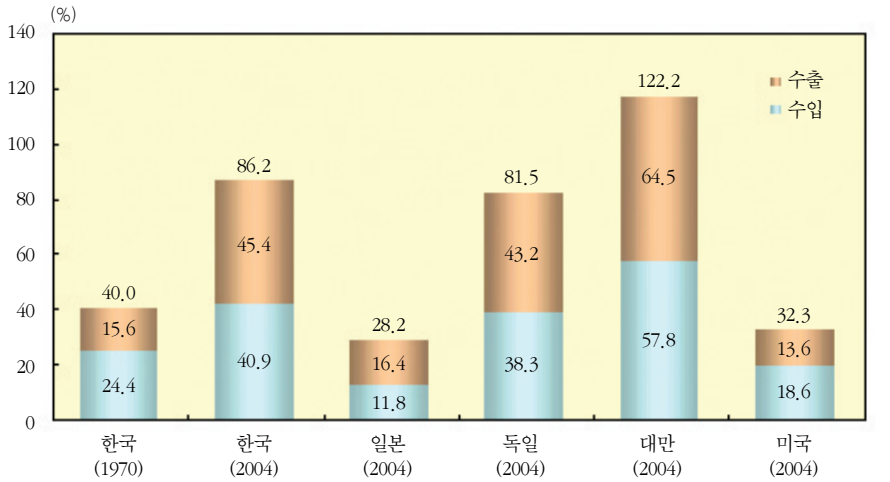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투자가 증가하여야 생산시설이 늘고 생산량이 증가함으로써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투자의 주된 밑받침은 저축이므로 저축의 증가없이는 궁극적으로 투자의 증가도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저축은 경제성장과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출입의 對GNI 비율

수출이란 한 나라의 국민이 만들어 낸 생산물의 일부를 국외에 내다 파는 것을 말하며, 수입은 소비나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생산물을 해외에서 사들여 오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러한 **수출입(수출+수입)의 국민총소득에 대한 백분율을 수출입의 대GNI 비율**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개 국내에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국내에서 여러 가지의 물건이 만들어지므로 수출입의 대GNI 비율이 낮다. 그러나 국토가 좁은 나라는 대개 국내에 자원이 빈약하므로 결국 외국에서 원재료를 사다가 이를 기초로 하여 물건을 만들어 외국에 내다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다.

수출입의 대GNI비율은 한 나라 경제에 있어서의 무역의 중요성을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수출입의 대GNI 비율은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에는 40.0%이던 것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2004년에는 86.2%로 높아졌다. 수출입의 대GNI 비율이 이같이 높아지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상품이 국외에서도 인정을 받아 점점 많이 팔리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가 국외에 대하여 점차 개방되어 감을 보여 준다 하겠다.

그림 1-6 수출입의 대GNI 비율의 변화와 국제비교



노동소득분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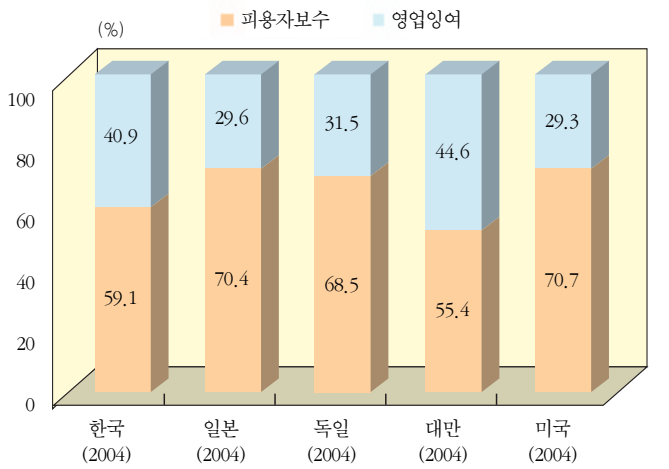
한 나라 국민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분배된다. 이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을 급여 즉 피용자보수라고 하고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잉여라고 한다.

여기에서 **피용자보수를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NI) 즉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노동소득분배율**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을수록, 그리고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된다.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살펴보면 〈그림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70.4%, 미국은 70.7%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59.1%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이들 나라와 비교하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하여 농업이나 영세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은 데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단위의 자영업이기 때문에 소득의 대부분이 영업잉여로 계상되는데 반하여 외국의 경우에는 농업이나 영세 도소매업의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들 부문에서도 피용자보수로 계상되는 노동소득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림 1-7

노동소득분배율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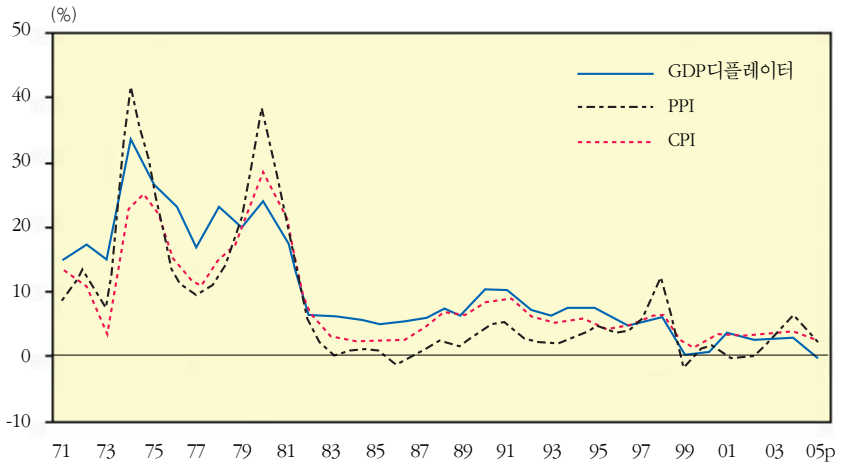


GDP디플레이터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얻어지는 값을 GDP디플레이터라 한다. 그런데 GDP추계시에는 생산자물가지수(PPI)나 소비자물가지수(CPI) 뿐만 아니라 수출입물가지수, 임금, 환율 등 각종 가격지수가 종합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GDP디플레이터는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요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로서 GDP라는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GDP디플레이터는 생산자물가지수나 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국민경제 전체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GDP디플레이터는 부가가치의 합인 국내총생산을 이용하여 산출되므로 기술구조의 변화나 생산성의 변화에 의해서도 실제 영향을 받고 있다.

GDP디플레이터와 여타의 물가지수는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그림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1974년과 1980년에는 GDP디플레이터나 PPI, CPI의 상승률이 모두 크게 오른 반면 물가가 안정된 1981년 이후는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며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상승 등의 영향으로 1998년에는 다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8 GDP디플레이터와 물가지수의 상승률 추이



잠재GDP

잠재GDP(Potential GDP)란 실제GDP(Actual GDP)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완전히 고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GDP 또는 자연실업률 상태하에서의 GDP, 즉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GDP라고 정의된다.

실제GDP에서 잠재GDP를 뺀 GDP갭(gap)이 부(-)이면 한 경제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수준 이하에서 조업하고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으면서 유효수요를 증가시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GDP갭(gap)이 정(+)이면 실제GDP가 잠재GDP를 초과한 것이므로 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총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잠재GDP는 단기적으로 달성되어야 할 최적의 GDP라기 보다는 그때 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 실제GDP를 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잠재GDP를 공식적으로 추계하지는 않고 있으나 한국은행 및 학계 등 일부에서는 연구목적으로 잠재GDP를 발표하기도 한다.

국민소득은 크기 못지 않게 개인간 분배상태도 중요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소득이 어떻게 생산되고 생산된 국민소득이 국민경제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처분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의 결과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전체 국민소득의 크기 못지 않게 개인간 소득격차문제가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국민소득의 분배는 생산물의 구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국민소득의 분배상태 파악은 총량 파악 못지 않게 경제정책의 수행에 필수적이라 하겠으며, 이외에도 소득분배 불균형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국민소득의 분배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다음에 설명하는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

먼저 **로렌츠곡선이란 미국의 통계학자인 로렌츠(M.O.Lorenz)가 한 나라 국민들의 소득분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한 곡선**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이 100억원이고 전체인구가 100명인 국가에서 소득을 1인당 1억원씩 균등하게 분배해 줄 경우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이 같게 되는 완전균등분배가 이루어져 〈그림 1-9〉의 OO′와 같은 대각선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이 다른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상위소득수준 인구의 20%가 소득의 40%를 점유하고, 하위소득수준 인구의 40%는 소득의 20%밖에 점유하지 못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분배의 불균형 상태를 표시한 것이 〈그림 1-9〉에서 O, L_1, L_2, O′를 연결한 로렌츠곡선이 된다. 만일 인구의 0.1%가 소득의 전부를 갖고 나머지 99.9%는 소득이 전혀 없는 완전불균형 소득분배가

될 경우 로렌츠곡선은 OTO′선이 된다. 따라서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로렌츠곡선은 아래로 늘어지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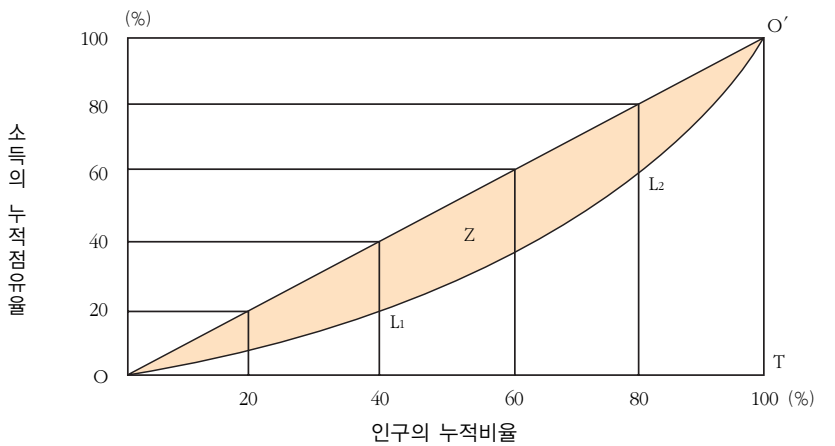
한편 지니계수란 프랑스의 통계학자 지니(Gini)가 소득분배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로렌츠곡선의 단점을 보완, 로렌츠곡선이 나타내는 내용을 하나의 단순한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1-9〉에서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가 클수록 소득의 완전균등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빗금친 면적 Z가 넓어지는 데 착안, 이 **면적 Z를 직각삼각형 OTO′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계산하여 소득불평등계수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지니집중계수(Gini coefficient of concentration) 또는 간단히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라고 한다.

$$\text{지니계수} = \frac{\text{Z의 면적}}{\triangle \text{OTO′의 면적}}$$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할 경우 로렌츠곡선은 대각선OO′가 되어 Z의 면적이 0이 되므로 지니계수도 0이 되지만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균등할 경우는 로렌츠곡선이 OTO′가 되어 면적이 같아지기 때문에 지니계수는 1이 된다. 그러므로 지니계수는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함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가장 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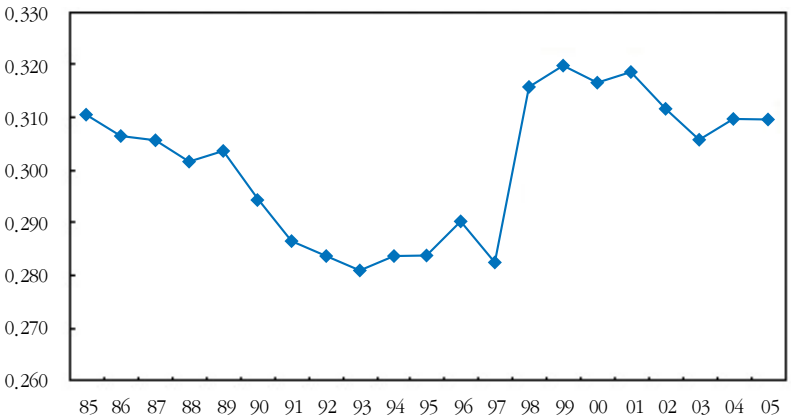
그림 1-9 로렌츠 곡선



쓰이는 소득분배 측정방법이지만 전 계층의 소득분배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므로 특정 소득계층의 소득분포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통계청에서 지니계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를 보면 1985년 0.311에서 1997년 0.283까지 낮아졌으나 1998년에 0.316으로 급격히 높아진 후 최근까지 대체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0 우리나라 지니계수[1] 추이



주 : 1)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www.ns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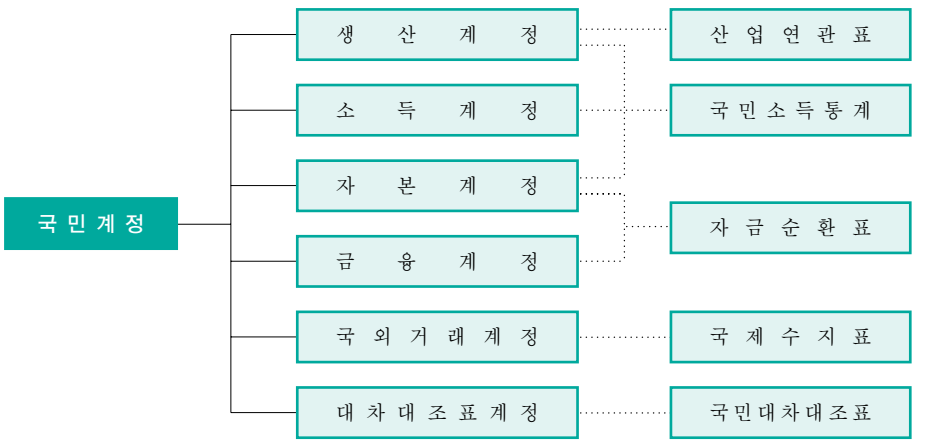
국민계정체계와 5대 국민경제통계

국민경제의 흐름은 국민소득통계만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내역은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경제부문간 자금의 흐름은 자금순환표를 통하여, 국외와의 거래는 국제수지표를 통하여, 그리고 일정시점에서의 국민경제의 자

산 및 부채상황은 국민대차대조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계들은 이론과 작성방법면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작성기준과 체계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민경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통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서로 연결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UN은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그림 1-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각 통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국민계정이라는 하나의 체계로 묶고 있다. 즉 산업연관표는 국민계정의 생산계정에, 국민소득통계는 국민계정의 생산계정 · 소득계정 · 자본계정에, 자금순환표는 국민계정의 자본계정 및 금융계정에, 국제수지표는 국민계정의 국외거래계정에, 그리고 국민대차대조표는 국민계정의 대차대조표계정에 각각 연결된다. 이와 같이 국민계정은 국민소득통계를 중심으로 하여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등 5개 통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및 자금의 흐름을 일정한 계정형식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계정은 일정기간 중의 국민경제의 활동결과와 일정시점에서의 국민경제의 자산 및 부채상황을 나타낸 것으로서 국민경제의 종합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1 국민계정의 체계와 5대 국민경제통계와의 관계



환경계정과 Green GDP

환경계정이란 1993년 UN이 경제활동과 환경간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계정의 위성계정 형태로 새로 도입한 「환경 · 경제통합계정」(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 SEEA)을 말한다.

환경계정은 기존 국민계정의 편제 대상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자산에만 국한되어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산림 · 지하자원과 같은 자연자산이나 물 · 공기와 같은 환경자산도 경제자산과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이용되는 자산으로 취급하여 동 자산의 기초 · 기말 스톡과 기간중 변동을 국민계정구조 형식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즉 광물채굴 또는 산림벌채 등에 따른 자연자산의 감모나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자산의 질적 악화 등 사회적 환경손실분을 화폐로 평가하여 이를 기존의 국민소득지표인 국내순생산(NDP)에서 차감, 「환경요인 조정 국내순생산」(Environmentally adjusted net Domestic Product, EDP)을 추계하게 된다. 언론이나 일부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Green GDP'는 이 EDP에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국민계정상의 공식개념이나 명확히 정의된 학술적인 개념은 아니다.

이와 같은 환경계정의 편제는 환경보존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이른바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관점에서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 운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환경계정을 편제하려면 자연자산의 스톡,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등 기초통계가 확충되어야 하고, 사회적 환경손실분에 대한 화폐가치화 기법이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계정의 편제가 가능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계정 편제기관에서 환경계정 편제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UN의 권고에 따라 한국은행은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통계를 매년 편제하고 있으며 환경계정의 사전단계인 환경보호지출계정의 시험편제를 추진하고 있다.